■ 코로나19가 가져온 아픔 / 도내 노인요양시설 가족면회 제한 넉달째

"유리창 너머로… 생이별이 따로 없네요"

모친 요양원 모신 A씨
"면회제한 취지 공감하지만 마음대로 볼수 없어 답답"
"할머니가 버려졌다 생각 할까봐 걱정돼" 목소리도
도내 일부 노인복지시설 영상통화로 대면 면회 대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생이별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A(38·제주시 삼양동)씨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넉달 째 못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도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 면회를 금지했다.

A씨는 "(할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양로원에 모신 건데, 이렇게 오래 못뵙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할머니께서 많이 답답해 하신다는 소식에 더욱 더 죄책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내려진 외부인 방문 제한 조치가 길어지며 요양·입원 중인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가족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 65곳, 양로원 2곳, 요양병원 10곳 등 총 77곳이다. 각 시설별로 요양원에 3292명, 양로원에 79명, 요양병원에 1061명이 입원 또는 요양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인 점을 감안해 지난 2월17일을 기해 외부인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고령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막아야 했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는 상황에서도 요양시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신 가족들은 면회 제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B(57)씨는 "요양원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 (면회 제한 방침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머니를 한번도 못 봬 답답하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싶다"고 호소했다.

노인요양시설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하다. 도내 한 요양원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중으로 된 출입문 너머로 면회를 실시하거나 영상통화로 대면 면회를 대체하고 있다. 입소자의 외출은 병원 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중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왜 자식들이 오지 않느냐"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내 한 요양원 직원은 "보호자 분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출입문 너머로 얼굴만 보고 가면 (입소자 어르신들이)더 외로워하신다"며 "확진자가 잠시 주춤했을 땐 시설 내 산책로에서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면 면회를 실시할까도 고려해봤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시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 면회는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요양시설에 대해 하루 2번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점차 잦아들면 면회 제한 조치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20대 만취운전자 연석 추돌 차량 화재

제주에서 만취상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와 보도를 가르는 경계석(연석)을 들이받은뒤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1일 제주서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7분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A(27)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주행하다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돼 105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넘는 0.174%의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소방서는 연석 충돌 과정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엔진룸으로 불이 옮겨 붙은 뒤 차량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인구 10만명당 27.3명 극단적 선택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

제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도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83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2명, 2015년 150명, 2016년 151명, 2017년 172명, 2018년 201명으로 2015년을 제외하곤 매년 늘었다.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을 기준으로 하되 OECD 기준 인구로 연령구조상 차이를 제거한 사망률)은 27.3명으로 충남(29.8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선 80세 이상이 69.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48.9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40대 31.5명, 30대 27.5명, 20대 17.6명, 10대 5.8명 등의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또 2018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만3670명으로, 2017년보다 1207명(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민기자

노인일자리 사업 도, 6월부터 재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6월부터 실외·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재개한다.

도는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장기화로 현장사업에 대한 재개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적은 비대면이나 실외사업인 공공형 일자리('문화재지킴이' 등 88개 사업) 사업부터 우선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사업 대상은 88개이며 인원은 문화재지킴이, 급식도우미, 행복충전안내도우미 등 1만699명이다.

도는 사업 재개에 앞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0개소에 코로나19에 따른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도는 수행기관별로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참여자 및 기관 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했다. 백금탁기자

충혼묘지 예초작업 호국보훈의 달 첫 날인 1일 제주시 충혼묘지에 관계자들이 나와 예초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출동 경찰에 흉기협박 60대 징역 1년·집유 2년

층간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층에 올라가 해코지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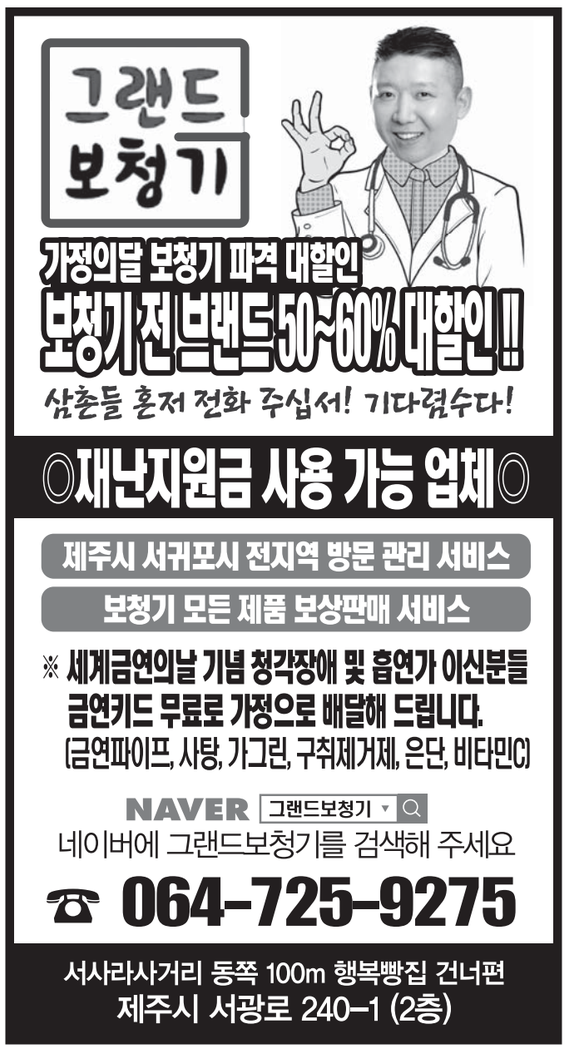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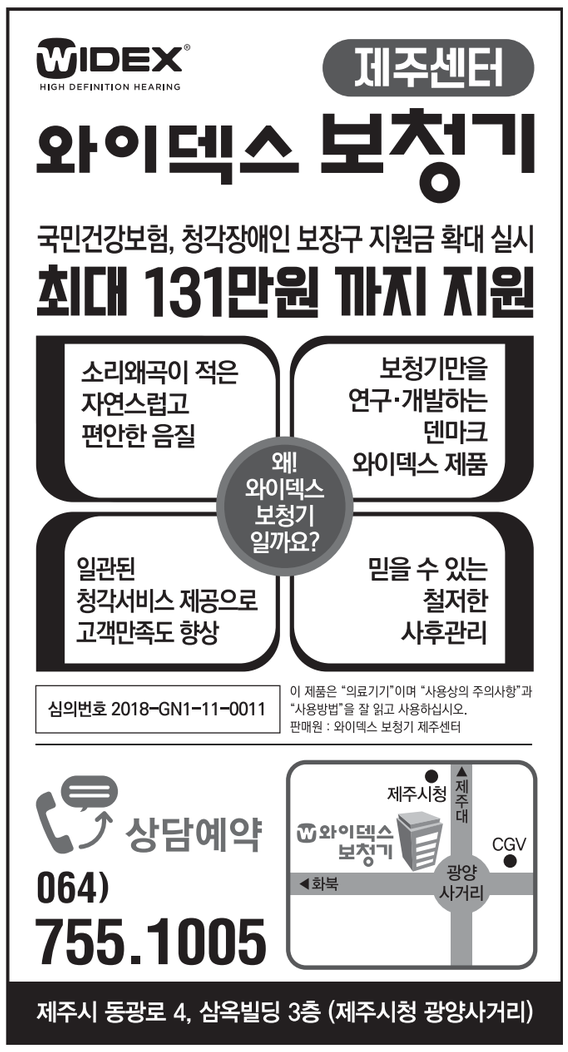
"3개 시멘트 회사는 교섭에 성실히 참여하라" 제주BCT노조 촉구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이 시멘트 회사·제주도청과의 1차 본교섭 결렬을 규탄하며 2차 본교섭시 진전있는 입장을 제시해 교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이하 노조) 등은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회사(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쌍용양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입장을 마련해 교섭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차 본교섭에서 시멘트회사는 노조의 요구안과 파업 이유를 부정하며 제주도의 중재 노력에도 입장조차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 파업을 야기한 책임과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는 2019년 현행 운임 대비 12% 운임 인상안을 요구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적자 나지 않을 운임, 과적 하지 않아도 생계가 보장되는 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회사는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인정하고 운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